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제11호
2022년 3월

전문가 기고

탄소중립과 기업의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

주요 이슈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및 법제화 동향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식품산업

ESG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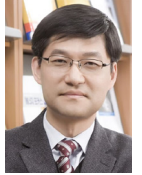
EU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발간

2022년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립 핵심 추진과제

주요 통계



탄소중립과 기업의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
이유수

탄소중립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목표가 되었다. 작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132개국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4.17%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 이미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지나 순조롭게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는 틀림이 없다. EU가 작년 7월에 공개한 탄소국경조정제는 역내로 제품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해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전환기간 3년을 거쳐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기업들은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사용에 의한 제품생산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 기업들 통한 국가 간의 무역도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이 아니면 거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운영시스템은 주로 대규모 원자력 및 화력발전 설비를 중심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다. 기업들도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을 통해 내수시장은 물론 수출시장의 확대, 나아가서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수단인 재생에너지의 막대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다.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출력 예측의 불확실성과 실시간 변동성으로 인해 안정적 출력유지 기반의 교류발전 설비의 운영과는 다른 운영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제 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자연조건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수용하도록 보다 유연한 운영체제의 변화를 통해서 에너지 공급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른 공급 부족 시 대체발전원의 즉각적 대응과 공급 과잉 시 잉여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아직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전기요금보다 높아서 재생에너지 전력의 기업 수용성이 크지 않지만 전기요금보다 낮아지면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기업에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현재의 전기요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구입할 수 있고, 공급 측면에서의 안정성도 보장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지속적 하락과 안정적 공급에 대한 기술적 진보는 이 시기의 도래를 앞당길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에 도달할 때까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이다. 당분간 대내외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친환경 에너지 활용에 대한 압력과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제품의 경쟁력 하락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업의 ESG 경영수준이 성과평가의 잣대로 부상하면서 탄소문제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는 미래 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생산공정 전환을 위한 설비와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설 곳이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내외적인 에너지 공급과 기업경영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과거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히려 적극적인 친환경 에너지 활용과 생산공정 전환 등이 미래의 기업 가치를 훨씬 더 키울 수 있다. 비록 에너지 공급구조 변화와 비용부담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미래 기업가치의 성장을 고려하면, 기업체질 변화의 계기로 삼고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기업의 혁신 노력과 더불어 유인체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세제지원 등이 뒷받침된다면 기업이 친환경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 관련 투자자원 조달과 기업체질 개선 노력 등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설비 및 기술 투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은 친환경 설비 및 기술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정부와 기업, 에너지업계 등이 상호 협력할 때 가능할 것이다.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및 법제화 동향



이진 연구원

ESG 경영의 범위가 공급망으로 확대되면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의 ESG 성과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생산방식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ESG 경영이 중요해지며 기업 공급망 전 범위에서의 사회적·환경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협력업체의 인권침해, 환경훼손과 같은 이슈가 비용 증가나 평판 하락 등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된 것이다. 기업들은 협력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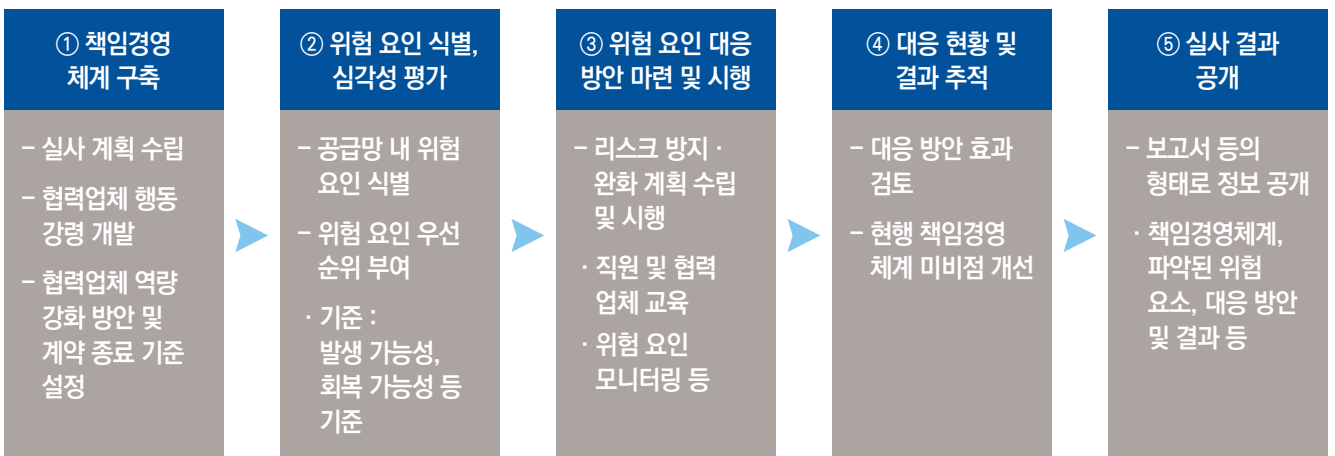
OECD는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OECD 기업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for Responsible Business)'에서 다섯 단계에 걸친 공급망 실사를 권고하고 있다. 첫번째 단계는 실사 계획 수립, 협력업체 행동강령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경영 체계 구축'이고, 두번째 단계는 '공급망 내 위험 요인 식별 및 심각성 평가'이다. 세번째 단계는 직원 및 협력업체 교육 등 '위험 요인 대응방안 마련 및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네번째 단계는 '대응 현황 및 결과 추적'이고, 마지막 다섯번째 단계는 '실사 결과의 이해관계자 공개'이다.

① 공급망 실사 절차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는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인권 침해, 아동 노동 착취, 생산시설 안전 관리 부족, 환경 파괴적 생산 방식 등 사회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지만 산업별 공급망 연합체에 가입함으로써 산업별로 특화된 공급망 관리를 시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전자기업들은 전자산업 공급망 연합체인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에 가입해 표준화된 공급망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OECD 기업 실사 절차



※ 자료 :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OECD 기업실사 지침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② 공급망 실사 의무 법제화 동향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실사 및 정보 공개를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한 기업에 대해 벌금부과, 영업정지, 공공조달 참여자격 박탈 등의 제약을 가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인권, 환경 관련 리스크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EU 회원국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위험산업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 전반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EU에 앞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국내법으로 공급망 실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인권, 독일은 인권과 환경 관련 항목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2년부터 주 내에서 영업하는 유통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인권 정보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 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미국 의회에서도 공급망 실사 및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어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처벌수위가 강화되는 것도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으로 진출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실사 방식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사전에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실사 법제화 동향

국가 (시행년도)	법률 세부사항
미국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 (Dodd-Frank Act Section 15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을 사용하는 기업에 적용 - 구매 자금이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주변국 무장세력 강화에 이용되지 않았음을 실사로 입증
프랑스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실사의무법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환경 위험에 대한 실사 계획 수립 및 이행과 공시 의무 부과 - 불이행 시 벌금 부과 가능, 피해자에 민사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독일 (2023년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실사법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Lk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에서의 인권 존중, 환경 보호를 위해 실사 의무화 - 3,000명 이상 고용한 기업 대상 (2024년부터 1,0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확대 적용) -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공공조달 참여자격 박탈 가능
EU (법안 승인 절차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실사 정책(인권, 환경 부문) 수립과 시행, 실사 내용 공개 의무화 - 고용 500명 이상, 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우선 적용 (시행 2년 후 고위험 산업 기업 중 고용 250명 이상, 매출 4천만 유로 이상 기업으로 대상 확대)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식품산업



정광호 객원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ESG 확산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식품산업은 홍수·태풍·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환경 관련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① 기후변화와 식품산업

1900년대 초 기상관측 이래 한반도 기온이 10년마다 0.18℃씩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인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태풍, 가뭄, 폭설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식품산업은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기후변화로 원재료가 되는 농작물의 경작면적이나 생산량 변화를 통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기후변화로 2030년 옥수수 생산량이 24% 감소하는 반면 밀 생산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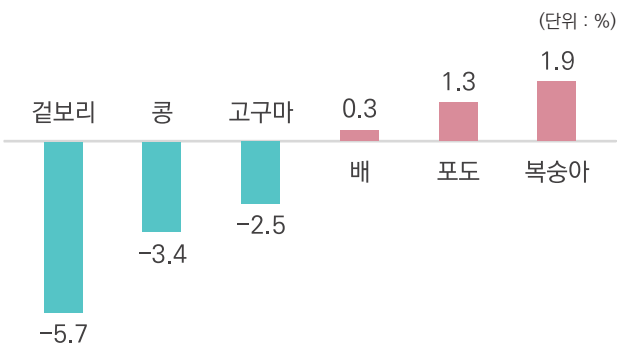
기후변화만의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농작물 경작면적의 추세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복숭아, 포도, 배 등의 작물은 경작면적이 늘어난 반면, 겉보리, 콩, 고구마 등의 작물은 경작면적이 큰 폭으로 줄어 들었다.

경작면적의 변화는 생산하는 원자재 가격에 반영됨으로써 식품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격 경쟁력에도 직결될 수 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대두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대두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식품기업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원재료인 대두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다.

실제 많은 식품기업들이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이 2011년 85만4천ha에서 2020년 72만6천ha로 15% 정도 줄어들면서 쌀 가격은 28%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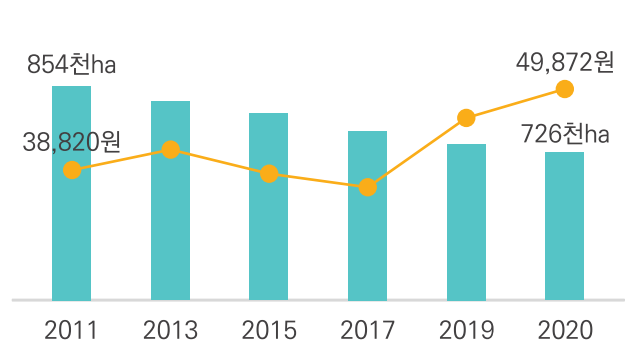
식품기업이 중장기 사업전략을 수립하거나,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후변화 이슈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점검하는 한편, 공급선을 다변화하거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 농작물별 재배면적 연평균 증감률



※ 자료 : 통계청(1980 ~ 2018 농작물 재배면적 데이터 바탕으로 재구성)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가격추이



※ 자료 : KAMIS 농수산물 유통정보(쌀 전체등급, 20kg, 도매가격)

② 규제 강화와 공급망 리스크

식품산업에서도 ESG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정보공개 의무화를 들 수 있는데 EU는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에 대해 환경, 사회, 인권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의무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 관련 정보 공개는 TCFD가 주도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기회 등과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 왔는데, 지난해 TNFD가 출범하면서 산림(생물다양성)보호와 관련한 정보 공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품기업은 ▲주요 원재료의 생산지 추적, ▲원재료 생산에 따른 산림파괴 여부 확인, ▲산림(생물다양성) 복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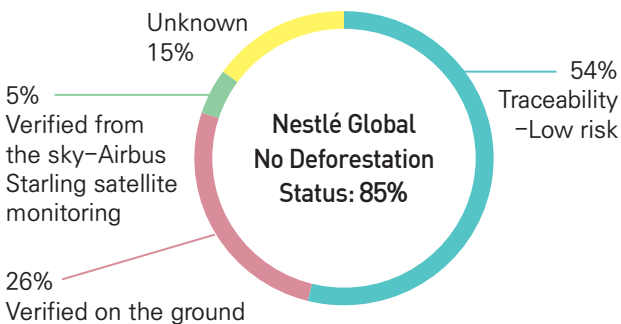
식품기업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 G20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관리를 강조한 바 있고, EU 및 회원국들은 공급망 리스크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에게 공급망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협력사 및 원산지의 노동·인권 리스크가 대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이후에는 산림복원과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한 공급망 관리가 이슈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U 지역을 비롯한 각국 정부기관과 투자기관들은 기업들에게 원자재의 산림파괴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재 생산지역의 생물종(種) 분포현황을 점검하고 유지·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공급망 관리에 나서고 있다. 월마트, 테스코, 코스트코 등 대형유통사는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등 지속가능성 인증 원재료로 생산된 식품의 입점을 장려하고 있다. 스위스 식품기업 네슬레는 원재료 생산 과정에서 산림이 파괴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공위성까지 동원하고 있다. 남미 등 열대우림을 주기적으로 촬영하고, 면적이 감소하면 현장을 실사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기업은 공급망의 노동·인권 리스크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단순히 리스크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활동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네슬레 공급망 산림파괴 모니터링 현황



※ 자료 : 네슬레

지속가능 농수산물 인증 프로그램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 수산양식사업 환경·인권·윤리 인증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 팜오일 생산지역의 환경·인권·윤리 인증

이번 '식품산업 ESG 경영전략'은 한국생산성본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

EU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발간



김선엽 연구원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금융의 역할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 로드맵을 통해 지속가능금융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ies, ESMA)은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2022-2024 (Sustainable Finance Roadmap 2022-2024)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립한 지속가능금융 전략(Strategy on Sustainable Finance)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속가능금융 전략은 ①통합된 지속가능 지침서 개발, ②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반의 감독 시행지침 수립 ③지속가능금융 관련 시장 리스크 식별 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은 그린워싱에 대한 EU 공동의 기준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 로드맵은 기후 시나리오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리스크 분석 기법 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민감도를 점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수단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의 정보 공개 기준을 준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ESG 투자 상품 출시 요건, 지속가능보고 기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ESMA와 NCA(National Competent Authority) 등의 기관들이 지속가능금융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의 ESG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발간으로 금융기관들이 공시하는 ESG 관련 정보와 탄소중립 감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ESG 금융상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시장 리스크를 식별하고 ESG 수준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는 만큼 ESG 요소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도 요구된다.

그린워싱 관련 ESMA 시행계획 주요내용

분야	시행계획 (예정 시기)
투자관리 (Investment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정보 공시를 통해 투자관리 부문 그린워싱 사례 식별(2022-24) - SFDR의 제8조와 제9조 기준 준수
투자서비스 (Investment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워싱 등 투자서비스 관련 기준에 대한 NCA의 역할 규정(2022-23) - 투자 서비스의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기준 준수
발행인 공시·지배구조 (Issuer's disclosure and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펀드 등 투자 상품에 대한 ESG 라벨 유럽 내 확산 유도(2022-24) - 유럽위원회(EC)의 그린본드발행기준(EU GBS) 준수
벤치마크 (Benchma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자산의 EU 분류체계 준수 강화(2022) - 기후전환벤치마크(CTB)와 파리협약준수벤치마크(PAB) 기준 활용
등급 산정 (Rat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평가기관 보도자료에서 ESG 공시 평가(2022) - 유럽위원회(EC)의 ESG 평가 기준 적용

※ 자료 :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ies

2022년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핵심 추진과제



김예나 연구원

정부가 2022년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과제에는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 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혁신인재 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022년 업무보고에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5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화 및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첫번째 핵심과제는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이다. 탄소중립 설비 지원, 클린 팩토리 보급 등을 통해 산업계 녹색전환을 본격화하고,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차량·선박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생산·유통·소비 전단계 폐기물 감량과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등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두번째 핵심과제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다. 저탄소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을 지원하고, 환경성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2년에는 국가 R&D를 1조 9,274억 원으로 확대하고, R&D 매칭 부담 완화 등으로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번째 핵심과제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이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경제 핵심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쏠 산업으로 디지털 융합을 확산시키는 한편 디지털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네번째 핵심과제는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이다. 수소·이차전지·로봇·재생에너지 등 디지털·탄소중립 분야에서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초연결 신산업 육성,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등도 추진한다.

다섯번째 핵심과제는 ‘혁신인재 양성’이다.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초·중·고 학습공간에 기기급 무선망을 제공하고, 기업의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혁신인재를 양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사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2년 핵심 추진과제

핵심과제	세부 내용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산업계 녹색전환 ▲청정에너지 확산 ▲미래 모빌리티 보급 지원 ▲녹색인프라 전환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실현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저탄소 산업·기술 투자 촉진 ▲연구개발 강화 ▲탄소중립 실천 확산 ▲탄소흡수원 관리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디지털경제 핵심 인프라 확충 ▲쏠 산업과의 디지털 융합 본격화 ▲디지털 포용·안심 기반 강화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디지털·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경쟁력 확보 ▲초연결 신산업 육성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본격화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 확충 ▲혁신인재 양성 ▲전국민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 자료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ESG 통계 지표

2022년 2월 28일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020	2020	'21.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1월	2월
녹색채권	31	55	122	131	135	144	145	151	162
사회적채권	471	503	689	710	747	765	788	794	820
지속가능채권	44	58	162	178	181	199	216	230	233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020	2020	'21.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1월	2월
녹색채권	30	57	128	139	141	148	148	156	168
사회적채권	736	785	1,125	1,166	1,214	1,247	1,273	1,273	1,306
지속가능채권	54	74	141	153	154	165	180	175	181

2. ESG 평가

MSCI 국내기업 ESG 등급별 비중

(단위 : %)

	AAA	AA	A	BBB	BB	B	CCC
2020년	0.0	3.9	14.3	31.2	23.4	20.8	6.5
2021년	1.3	11.4	20.3	22.8	19.0	20.3	5.1
전년대비(%p)	1.3	7.5	6.0	▲8.4	▲4.4	▲0.5	▲1.4

자료 : MSCI ESG Ratin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3. 기타 통계

대륙별 SBT* 가입 기관 수

대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한국	한국 제외			
가입 기관 수	24	1,443	14	502	70	438	86

*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2022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금융
2월	비재무정보 공개 법제화 및 TCFD 기준 채택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철강
3월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및 법제화 동향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식품산업
4월	ESG위험 방지를 위한 Taxonomy 법제화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전자
5월	생물다양성협약과 국내외 정책 동향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자동차
6월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과 배출권거래제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유통

7월	여성임원 할당제 시행 주요 환경 정책의 경제성 분석
8월	IFRS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주요국의 자연자본 보전 정책
9월	플라스틱 규제 동향 및 과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동향
10월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추진 동향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
11월	한국기업의 ESG 평가 결과와 과제 사회적 가치 측정과 활용
12월	COP27 개최 결과 및 평가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및 법제화 동향

이진 연구원
T. (02)6050-3143 | E. jlee99@korcham.net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식품산업

정광호 객원
T. (02)398-7668 | E. khjeong@kpc.or.kr

EU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발간

김선엽 연구원
T. (02)6050-3139 | E. sunykim@korcham.net

2022년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립 핵심 추진과제

김예나 연구원
T. (02)6050-3141 | E. yenakim@korcham.net

ESG 통계 지표

김선엽 연구원
T. (02)6050-3139 | E. sunykim@korcham.net